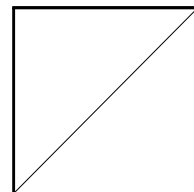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95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8. 26. (제 15 차)

의
결
사
항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변경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8. 26.

1. 의결주문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 등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3. 주요골자

「은행업감독규정」 제63조의2제1항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비율을 동조 제3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함

4. 관계부처 협의

기획재정부와 협의(20.8.18.)

5.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붙임 1>

(별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변경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 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63조의2 제1항에 대하여 동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 2021년 3월 31일까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

붙임 1 관계 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부채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건전성 규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략)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기별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할 것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 가. (생략)
 - 나.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은행업감독규정

제60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은행을 말한다.

제63조의2(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한다)을 100분의 8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시장분석과	외환감독국
연 락 처	02-2100-2855	02-3145-7928